

투데이 칼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안보

며칠전 나는 러시아 국적이 타고 북한 영공(동해)을 가로질러 연해주로 여행을 떠났고 북한주민은 목선을 타고 동해NL을 가로질러 삼척항으로 들어왔다. 분단된 조국이 참 아이러니하다.



박보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북한주민이 목선을 타고 아무런 제지없이 탈북에 성공했다. 이는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북한을 탈출할 때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목선은 북한과 남한 모두의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번 사태는 리더의 성능의 한계 문제이지 단순 경계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경계에 실패한 군은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수구보수당이 호기를 잡은 듯 안보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당리당락적 자기모순이다. 천안함, 노크 귀순, 각종 방산 비리 등 안보에 타진 시절 집권했던 자유한국당이 안보에 대한 사명감과 능력은 갖추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보수정치세력들은 늘 안보 제일주의를 외친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의 제일 과제임이 분명하다. 안보는 분명 보수 진보 그 이상의 문제다. 그럼에도 보수는 안보를 진보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민

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갔음에도 국민들에게 서울에 있는 것처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으로 망명까지 고려했었다. 또한 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넘겼다.

후전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평시 및 전시 작전권을 모두를 미국이 갖도록 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가 아니라 외국에 고스란히 위탁한 셈이다. 이미 군사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 왔음에도 전시 작전권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야 한미 합의에 의해 2012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시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다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인계받기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나라의 안위를 외국에 위탁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 자들이 안보를 논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보수정권에서 어찌구무 없는 일도 있었다. 자신들의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군사적으로 대처하며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에게 총을 쏘서 군사적 긴장도를 올려달라고 돈까지 건넸다. 군사적 긴장을 올려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려는 것을 정

념 안보라 할 수 있는가?

안보에 쓰이는 돈은 또 어찌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을 15.3~16.3%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4.4~14.8%에 머물렀다. 국방비 예산 증가 비율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8.9%였지만 이명박 5.2% 박근혜 4.1%에 불과했다. 어디 그뿐이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방산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일 함 음과 탐지기, 대북확성기 160억 사기, 600억대 레이다 산업 실패, 야간 투시경 비리, 군복 납품 비리, 방탄모 납품 비리, 차기 전투기 사업 비리, 6조 8천억이 들어간 내부 반 현대화 사업 비리, 군 헬기 수리 온 결함, 고를 헬기 1500억 구입, 등 이루 열거 할 수가 없다. 안보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도 안보를 말할 열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불는다면 이겨야 한다. 그게 안보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99년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우리 측은 7명 부상과 참수리 급 고속정 2척 파손에 그쳤지만 북측은 경비정 1척 침몰, 5척 파손, 사상자 50(전사 20, 부상 30)여명이 발생했다. 우리 측의 일방적 승리다. 2002년 두 번째 연평해전이 일

어났다. 우리 측은 참수리 고속정 357호 침몰, 6명 전사, 19명 부상인 반면 북측은 초계정 등산곳 684호 파괴, 13명 전사, 25명 부상이었다. 이 또한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었다. 우리 측 병사가 무려 46명이 사망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입각한다면 안보에 완전 구멍이 뚫린 셈이다.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격침시킨지조차 알 길이 없다. 그해 11월 연평도가 포격 당했다. 우리 측 군인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망, 3명이 부상당했다. 북측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 보수는 안보를 지킬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맥아더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천안함 관계자들은 경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 신상발령은 군 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위한 올바른 조치인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북한과 단 한 차례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싸우면 이겨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병법의 때가 손자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이런 게 진정한 안보다.

보수정권과 정당은 입으로는 늘 안보를 외치지만 실상 사명감도 능력도 부족했다. 오히려 민주정부야말로 강력한 안보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소위 보수정치세력들의 거짓 안보장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사설

새만금 전기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급부상

새만금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새만금에 전기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개월 사이에 벌써 6개 기업이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마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이 한국 전기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르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것은 장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거라서 매우 기쁘고도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 엇그제만 해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투자 협약 체결이 있었다는 보도이다. 주식회사 SNK 모터스가 1118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조립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의 자리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함께할 정도로 큰 행사였다. 행사장의 그 자리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과 최용범 행정부지사과 김임준 군산시장과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던 것이다.

새만금이 전기자동차의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반가움을

나타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SNK 모터스만 해도 신규 일자리를 1520여 개나 창출하리라는 것이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처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투자협약을 마친 다른 기업들도 그에 못지않은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면 새만금 인근 지역 특히 군산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이다.

새만금에 전기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 분명한 지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다. 아직은 투자 협약만 마쳐진 것이므로 실제 투자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인센티브와 함께 도움을 줄 것은 주변서 약속한 기업대로 투자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체도 전기자동차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므로 그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어쨌든 새만금을 전기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급부상시킨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차하를 보내는 바이다.

전북의 인구 절벽 이유가 없지 않다

전북의 인구 절벽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까닭이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겠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출생통계를 조사한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답답하다. 출생률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아진 것이 전무하다. 출생률이 가장 저조했다는 1995년도와 비교해도 출생률이 떨어졌으니 말이다. 당국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뭐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기분이다. 전북도와 관계자들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모양새인데 그것은 도민들이 보기에 영 좋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 날 거듭해서 발표했던 말들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한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대책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 전북도의 저출산 해결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

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후로 감감 무소식이다.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전북 지역에 대해 전북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전북의 인구 절벽에는 그 이유가 없지 않다. 인구 1천 명 당 출생률이 5.4명인데 그치고 있어왔을 지역구 대비 최저치라는 지적이다. 그에 더하여 도내에는 젊은이들의 혼인률이 줄고 이혼률은 오히려 전국 평균을 한참 웃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말이지 이래로는 전북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수 배워야겠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보통으로 여겨서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 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고문

지난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 불법 폭력집회가 난무하던 시절 시위대와 경찰은 항상 폭력과 진압으로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어 상호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촛불집회는 큰 부상이나 불법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권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함께 만들어야

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하지만 명확한 집행 기준이 없어 현장 업무에 혼란을 겪는 일이 많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권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

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즉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불법집회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대화경찰관 운영, 인권교육 강화, 집회현장에서의 경비경찰의 소

속, 신분, 식별표시를 부착하는 등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추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는 유연한 대처와 국민에게 현장에서 정당하고 신뢰받을 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허행욱 임실경찰서 경비팀장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전주매일' (Jeonju Maeil)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large sun in the background. The text promotes the newspaper as a source of hope and information for citizens, highlighting its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news and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Key phrases includ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citizens, providing courage and hope) and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Better newspaper, more loved newspaper, newspaper with readers). It also mentions '전주매일' as a platform for citizens, providing courage and hope.